

데스크 시각



장 필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금호타이어 매각 논란이 지역 사회를 달구고 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1조3000억 원) 만기를 3월 말로 1개월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중국 자본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려고 하자 노조가 해외 매각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먹튀’ 우려가 있는 해외 매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이다.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쥐고 있는 채권단은 더블스타 외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없어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매각 조건도 고용을 3년간 보장하고 최대 5년간 매각 제한 기간을 정해 놓아 노조가 걱정하는 고용 불안이나 광주와 곡성 등 국내 공장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더블스타가 중국 내 3개 공장을 보유한 금호타

벼랑 끝 금호타이어 살릴 해법은?

어 인수를 통해 중국 1위는 물론 글로벌 10위 이내 업체로 도약을 꿈꾸는 만큼 실익이 없는 국내 공장 폐쇄는 시간문제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호타이어 운명은 채권단과 노조의 손에 달려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 결정권은 채권단에 있지만 매각 시 노조의 동의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단과 노조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채권단은 해외 매각 불발 시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더블스타가 싫더라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매각만이 최선은 아니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해법도 채권단과 노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채권단은 우선 해외 매각에 따른 ‘먹튀’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의 행태와 최근 GM의 대규모 회망퇴직을 지켜보면서 해외 자본의 ‘먹튀’ 우려가 커진 상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청산가치(1조 원)가 존속가치(4600억 원)보다 높다면 더블스타 매각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만 노사가 마련한 자구 계획을 이행할 경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575억 원 많아진다는 것을 아는 만큼 굳이 더블스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 금호타이어가 국내 타이어업계 유일의 방산업체라는 점도 고려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노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채권단이 해외 매각을 고집하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강성 노조가 있다. 강력한 노조가 있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더블스타라는 인수자가 있을 때 파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4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파업 현장은 흡사 전쟁터와 같았다. 노사 협상 결렬로 경찰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는 답장은 물론 공장 내부에 타이어를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매캐한 연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 사태가 일촉즉발로 치달자 인근 주민들은 집을 떠나 대피를 하기도 했다.

24년이 지난 지금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는 공장 근처 통신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은 흘렀지만 변한 것이 없다. 데

자뷰도 이런 데자뷰가 없다.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금호타이어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대체로 맞는 얘기이지만 생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선 의미 없는 책임 공방일 뿐이다. 채권단과 외부에서 바라보면 노조가 원인이지만 노조가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고 그 원인의 상당부분이 습관처럼 매년 파업을 하는 강성 노조에 있다는 지적을 냉정하게 새겨야 한다.

강성 노조 이미지부터 바꿔야

고공 농성이나 총파업도 좋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기벌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향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경쟁사처럼 40년 무분규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무분규를 약속하거나 금속노조 탈퇴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면 어떨까.

금호타이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금호타이어 존속을 위해서라면 고강도 구조 조정을 동반한 법정관리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다. /@kwangju.co.kr

社說

‘충격’ ‘경악’ 안희정 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까지 안 지사에게 네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그제 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더군다나 안 지사는 마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에도 김 씨를 불러 미안하다면서서도 또 일을 저질렀다는 대목에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씨는 바짝 마른 입술로 “저에게 마투 언급을 하고 사과까지 한 상태에서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한테 가장 두려운 것은 안 지사이다. 제가 오늘 이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들이 저를 지켜 주시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길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러시아, 9월 스위스 출장을 수행하며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씨의 폭로 이후 안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향후 정치 지형을 뒤엎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6·13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구도까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 지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권력 관계를 이용,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임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해서 안 지사의 다른 성폭력 관련 의혹도 밝히고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묻히고 피해가 묻힐 게 뻔해 신고하지 않는 성폭력 사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전기차 선도 도시 경쟁 광주만의 전략 세워야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전기차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매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국의 많은 시·도가 직접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 등 수요 창출에 앞장서면서 이를 바탕으로 생산업체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역시 민선 6기 들어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를 목표로 빛그린산단에 3000억 원을 투입해 부품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정부 지원 아래 2021년까지 선도 기술 지원센터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돕게 된다.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전기차 기업 유치를 든든한 밑거름이다. 중국 조이롱자동차와 협약을 토대로 전기 시내버스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가 정부에 “미러차 개발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군산시의 요청은 GM이 운영하던 남호주 엘리자베스 공장을 영국 자본이 매입한 뒤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자 호주 정부가 적극 지원한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 대구시도 지난해까지 2441대였던 전기차 보급 대수를 올해는 5000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으로 꼽힌다. 광주시의 경우 자동차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전기차 시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정책과 인프라에서 앞선 만큼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준비를 통해 전기차 선도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한 국한  
광주교대 외래교수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두 모습

미화원들은 근무 시간 조정 없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입주자는 관리비를 더 부담하게 되었지만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던 시민들은 칭찬과 함께 SNS로 이 소식을 전했으며, 고용노동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고 부촌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예이다. 지난해 말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1월 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해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그 아파트의 입주인 대표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와 경비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원 해고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매달 가구당(3000여 가구) 3570원 더 부담되며, 경비 업무는 용역업체에 맡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올 2월 9일자로 경비원들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냈고, 이에 그 경비원들은 ‘부당 해고’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입주인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애석한 일이지만 해고 예정 일정을 한 차례 미루며 경비원에게 많은 배려를 했다”고 한다. 이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각종매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실 최저 임금(最低 賃金)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고용자의 피고용인 저임금 착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다. 최근의 최저 임금을 보면, 작년은 6470원(전년 대비 7.3% 인상), 올해는 7530원(16.4% 인상)으로 월급 기준으로 157만 3770원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 마련했다는 의미가 되며 소득 증가로 내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계 및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경영과 고용 환경이 악화될 것이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의 경우 소비가 늘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고용이 줄고 영세 사업자가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16.9% 포인트 높았다. 그래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적 전망도 참고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실물 경제가 무려 20년 수렁에 빠져 기업과 가계가 동시에 무너졌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은 하락,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이 불안하여 저임금과 고물가로 이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경제인들은 앞장서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에서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여 그 수요가 다시 공급을 이끌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그 첫 출발이 임금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돈이 더 생겨야 소비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매출 증가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있되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 경제가 제대로 지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사례가 경제 살리기 해법의 정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례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는 우리들의 컨셉서스이다. 울산의 사례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의 좋은 롤 모델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가르쳐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배려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기쁘게 채워준다. 우리는 예부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기 고

노년기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누가 키울까?

저출산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가 ‘원 차일드 식스 포켓’(One-child, Six-pocket)이다. 아이 한 명에 돈주머니가 여섯, 즉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이렇게 여섯 명이 돈을 쓴다는 얘기로, 불황에도 유아 용품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 한 명이 6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앞으로 젊은 사람이 굳이 노인을 보살피지 않아도 될 사회가 올 수도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 할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일본은 노인 돌보는 로봇과 애원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미래가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요양원 어딘가에 갇혀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과 함께 필자는 한 달 전에 호남대 학생들과 함께 네덜란드 치매 마을인 호그벡을 다녀왔다. 호그벡 치매마을은 우리나라 방송에서 믿기 어려울 서프라이즈 이야기로 소개됐던 곳으로, 말기 치매 환자들이 정상인처럼 생활하는

노인 거주 시설이다. 치매 노인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치료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곳이다. 치매 환자의 생활 방식이나 취미에 따라 선호하는 거주 형태에서 6~7명의 치매 노인이 간병인 1명과 함께 생활하며, 마을 내의 슈퍼마켓, 극장, 레스토랑, 미용실, 문화 공간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은 일상복을 입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길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

이런 생활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호그벡 담당자는 치매 환자들이 스스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약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치매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한다. 150명의 치매 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190명의 관리자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250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까? 세계 각국에서 호그벡을 벤치마킹하고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이와 비슷한 치매 마을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호그벡이 부러워할 만한 시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의 미래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호그벡 치매 마을을 만든 네덜란드의 정신

은 무엇일까? 시설 수준, 관리 비용, 종사자 수 등만을 생각했다면 호그벡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하는 마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유’라는 사고 방식이 네덜란드에 없었다면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가 넘는다고 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을 듯하다. 최근에 고령화 사회의 복지 서비스 수단으로 타임뱅크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웃 간에 서로 봉사 시간을 교환해 도움을 주고받는 제도로서 남을 도운 시간이 타임뱅크에 저장되고, 자신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층에게는 봉사 시간을 참여 소득으로 제공해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 즉 등록금이나 교통비 등으로 지원받는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이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고 상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기반에서 스마트 공동 주택을 통한 실시간 건강 체크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無等鼓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정치(政治)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를 ‘정’(政)이라고 한다. 소유·권력의 균등과 윤리의 평등, 능력의 배분, 여기에 사회 시설의 확충, 직분의 정비 등을 통해 질서를 세워 바로잡는다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나서고 있다. 정 말 올바른 정치는 무엇일까. 세종대왕은 “정치를 잘하려면 반드시 시대의 치(治亂)의 자취를 살펴 보아야 한다. 치란의 자취를 살펴보면 오로지 역사의 기록을 상고하여 잘 다스리지는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시대에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본 비고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정치로 이끌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시대정신’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방선거가 석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를 통해 제시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치(政治)가 아닌 ‘정치’(情治)가 판을 치는 모양새다. 일부 여당 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킬 정책보다는 너도 나도 ‘문심’마케팅을 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정권 교체 이후 줄곧 고공 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만큼 여권 지지층 대부분이 문심의 영향권 안에 있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 직책을 가져다 쓰고 있다. 어떤 구청장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심 마케팅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어떤 광주시장 후보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직책을 내려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단순히 ‘입심양명’하려는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추운 겨울, 수개월 동안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적폐 청산’을 외쳤던 민주 시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권원 정치부부장 cki@

‘정치’(情治)?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